

군부대 부정선거...

부재자 공개투표

“여당표 80% 이상 나오게 하라” 지시
 선관위 참관안해... 파문 우려

외출저지

지난 16일부터 현역장병 56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 일부 부대의 부재자 투표에서, 국군기무사(사령관 서완수 중장)의 개입으로 공개기표, 중간 검표 등 선거부정 행위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다고 한 현역장교가 폭로했다.

육군 9사단 28연대의 보병 소대장 이지문(24) 중위는 22일 오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(공선협) 전국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중대별로 실시된 이번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‘남북대화를 하려면 30% 지지 기표고는 북한이 상대로 삼지 않으려 하니 여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정치 안정을 이뤄야 한다’는 내용의 정신교육이 계급별·소대별로 있었으며, 단위부대에 따라서는, 중대장이나 인사계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찍도록 하는 등 공개 기표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”고 밝혔다.

이 중위는 또 “일단 투표가 끝난 부재자 투표지는 기무사 파견대가 발송업무를 맡았다”면서 “기무사 파견대에서 서신검열기로 투표내용을 표본조사해 그 결과를 중대장급 이상 일부 지휘관들에게 알려 여당표가 많이 나오도록 독려하는 자료로 삼았다는 사실을 상급장교들을 통해 들었다”고 말했다.

이 중위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게 된 동기에 대해 “지역 선관위

나 공선협 등 외부 관련단체의 참관이 제도화돼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막을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쳐주기를 바라는 뜻에서였다”고 밝혔다. 이 중위는 이번 군 부재자 투표에서 “9사단의 경우, 지난 17, 18일과 20일에 실시된 부재자 투표에 앞서 기무대 파견 장교가 선거개입을 꾀하는 일부 중대장들을 만나 여당표가 80% 이상 나오도록 하라고 회유·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밝히고 “사단에서는 일부 장병들이 이러한 투표부정을 양심선언 등을 통해 공개할까 두려워, 지난 2주일 동안 사병들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”고 말했다.

이 중위는 자신이 이 부대에 전입하기 전에 이뤄진 지난해 광역의회선거 때에 군 부재자 투표에서 “공개 기표행위는 물론 정치성 있는 교육 등도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”면서 “지난번 부재자 투표에서 야당표가 많이 나오는데 충격을 받아 기무사가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했었다는 말이 부대 안에 나돌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이 중위는 부산 출생으로 서울 남강고를 거쳐 고려대 정외과를 나왔으며, 졸업과 동시에 학군단 장교 29기로 임관돼 현재 9사단 28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.

이 중위는 군 부재자 투표에서 문제가 생길 때 중간간부의 과잉 충성 탓으로 돌리기 위해 △연대



육군 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14대 총선 ‘군부재자 투표에서 국군기무사의 선거개입으로 공개 기표행위 등이 저질러졌다’고 폭로하고 있다. <유창하 기자>

참고자료 11 92. 3. 23 한겨레 신문

장·대대장·중대장 등 지휘계통에 따라 반드시 개별 설득을 하도록 하고 △정신교육 등은 문서화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△중대 이하 규모로만 선거교육을 했다고 밝혔다.

이와는 별도로 육군 제1사단 이아구개(24) 병장이 이날 <한겨레신문>에 서면으로 제보한 바에 따르면, 이 부대에서도 부재자 투표 때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여당후보 지지 강요와 공개기표 등이 행해졌다고 한다.

이 병장은 소속 중대장이 투표지에서 기표 2·3·4번은 손으로 가리고 1번을 찍도록 했으며, 부재자 투표에 앞서 사병들을 모은 뒤 “여당표가 적게 나오면 지휘관들이 문책을 당하고 진급에도 지장이 있다”며 “기무사의 서신검열용 기계로 누구를 찍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알아서 잘 찍으라”고 강요했다고 밝혔다.

군 부재자 투표는 21일까지 99%가 실시됐으며, 23일 완료된다. 한편 국방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면서 중대급 단위에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함은 선관위 규격에 따라 완벽한 잠금장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으나, 일부 일선부대에서는 투표함을 그대로 우체국에 전달하지 않고 우송 분류작업을 부대에서 직접한 것으로 밝혀졌다.

국방부는 또 기표소 단위로 장교 1명, 하사관 1명, 사병 4명으로 이뤄진 투표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, 지역선관위에서 참관을 요청할 경우 외부참관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2일 중앙선관위는 “군 부재자 투표에 지역선관위가 참관등록 요청받은 바 없으며, 실제 참관한 사례도 전혀 없다”고 확인했다.